

학생선도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방문조사 소위원회

1

목적

학생선도부 운영 관련 방문조사는 학교에서 학생선도부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는 등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함

2

경과

- 2016. 12. 28. 심의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소위원회 구성
- 2017. 02. 06. 소위원회 위원 논의: 심의 방향 및 내용 보강, 추가 검토 자료 등
- 2017. 02. 08. 타 시·도교육청 관련 자료 요청(경기도교육청 외 3개 시·도교육청)
- 2017. 02. 15.~20. 협조자료 취합 및 검토
- 2017. 03. 07. 방문조사 소위원회 회의
- 2017. 04. 12. 방문조사 소위원회 보고서 작성 및 추가검토
- 2017. 07. 03. 심의위원회 심의

3

검토 사항

가. 관련 법령

-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제14조 제3항

-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제20조 제4항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
- 4)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나. 방문조사 결과 실태보고

1) 선도부 운영규정 현황

가) 지역별 선도부 운영 현황(각 시·군 명칭의 ‘가나다’ 순)

연번	지역명	학교수	선도부 운영수	2016. 방문조사 대상학교
1	고창군	6	5	도내 ‘시’지역 소재 고등학교 21개교를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1개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
2	김제시	9	4	
3	남원시	9	5	
4	무주군	5	4	
5	부안군	7	5	
6	순창군	3	3	
7	완주군	8	5	
8	익산시	17	15	
9	임실군	3	3	
10	장수군	5	4	
11	전주시	29	21	
12	정읍시	13	10	
13	진안군	5	4	
합계		119	88(73%)	

(현황은 2015년도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때에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나) 명칭별 현황

명칭별 구분	선도부	(생활)지도부	(바른)생활부	기타(명예부, 예절부, 생활환경부, 학생자치부 등)
	63(71.6%)	6(6.8%)	12(13.6%)	7(8.0%)

다)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현황

그린마일리지 운영	선도부 운영	선도부 미운영	비고
	50(56.8%)	38(43.2%)	선도부 없이 벌점규정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2) 실태조사 결과 검토

가) 근거법령 부존재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련 조항은 교육목적상 학생의 지도와 훈육·훈계는 법령이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지도권에 속하는 업무임
- (2) 교사(교원)는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이므로, 학생지도권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에 의해 교사(교원)에게만 있음
- (3) 즉,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을 학생자치기구(선도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나) 교권 침해

- (1) 학생지도권은 교권의 핵심내용으로 지도 대상인 학생에게 법적 근거 없이 위임함으로써 교권을 침해함
- (2)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규정함

다)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에 위배

- (1)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3조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권리영역별로 규정하고 있음
- (2)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업무의 일부를 학생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학생선도부의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음
- (3)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됨
- (4)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고,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임

라) ‘그린마일리지제도’와의 연관성

- (1) 학생선도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지도·단속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벌점을 부과함
- (2) 학생선도부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됨
- (3) 그린마일리지제도는 상·벌점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하였으나, 벌점 부과 위주의 운영과 상점을 받기 위한 거짓 선행 등 부작용 때문에 운영하지 않도록 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안내한 바 있음(인성건강과-27429, 2015.10.21.)
- (4) 이처럼 그린마일리지제도는 학생선도부의 활동에 강제력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에게 위임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에게 생활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각종 기구(선도부 포함)의 운영을 금지할 것
- 나. 교원의 학생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학교생활규정은 폐지할 것
- 다. 학교생활규정에 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은 폐지(삭제)할 것
- 라. 학교생활규정 준수 등의 필요한 활동은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권고함

2017. 7.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방문조사 소위원회 위원 김 석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방문조사 소위원회 위원 이영진